

대약진운동 빼닮은 중국 ‘제로 코로나’

태평로



김민철
논설위원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양상이 심상치가 않다. 지난 24일 신장 우루무치에서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다. 그런데 방역 차원에서 아파트를 봉쇄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신속한 진화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급속히 퍼졌다. 이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의 대표적 대도시에서 코로나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진핑 물러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 3년 가까이 이어지는 고강도 방역 정책에 지친 시민들 분노가 우루무치 화재를 도화선으로 폭발한 것이다.

마오쩌둥은 1958년 ‘7년 안에 영국을 초월하고 1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목표를 내걸고 ‘대약진운동’을 벌였다.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경제성장률 목표와 속도전을 강조하며 국민들을 몰아붙였다. 온갖 비과학적인 방법도 난무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참새와 의 전쟁’이다. 참새가 낱알을 쪼아 먹는다고 소탕령을 내렸다. 그러나 막상 참새 수가 줄자 먹이 사슬이 무너지면서 쌀 수확량은 점점 줄고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대기근’으로 번졌다. 수

천만명이 굶어 죽는 생지옥이 펼쳐졌지만 지방정부들은 곡식 생산량을 상부에 허위 보고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무도 바른말을 못해 이 정책이 4년 넘게 지속됐다. 정치 지도자가 잘못 판단해 실정을 밀어붙이고 제대로 이의를 제기할 세력이 없을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여러모로 대약진운동과 닮은꼴이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하자 전 세계가 “불가능한 일”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지난 3년간 미국의 ‘코로나 사령관’ 역

리더가 잘못된 판단 밀어붙이고 아무도 바른말 못 해 참사 지속 3년 코로나와 싸워 얻은 공식, 백신 접종 늘리며 일상 회복밖에

할을 한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중국이 어떤 목적이나 최종 목표도 없이 장기간 봉쇄에 들어갔고, 이는 공중 보건을 위해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지도자가 한번 방향을 정하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터무니없는 목표를 내걸고, 납득할 수 없는 방법(장기 봉쇄)을 쓰고, 믿을 수 없는 통제가 난무하고, 주민들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엔터티 정책을 장기간 지속하는 점에서 대약진운동과 닮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인류는 신종 코로나와 3년 싸우면서

단순하지만 소중한 공식을 얻었다. 좋은 백신을 선택해 접종을 늘리면서 점차 일상을 회복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신종 코로나도 전과율은 높지만 중증화율·치명률은 낮아지는 쪽으로 진화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놀랍게도 3년 전 우한에 신종 코로나가 처음 등장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의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백신 접종도 엉망이다. 파인셀타입스(FT)에 따르면, 젊은 층은 물론 60세 이상 중국 인구 2억 6700만 명 중 3분의 1이 3차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 부작용을 걱정해 맞기를 꺼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노인들의 백신 접종률이 90% 이상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중국이 자체 개발해 사용하는 백신 ‘시노백’ 등의 효능도 좋지 않다. 지난 3월 홍콩대 연구진 발표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효능은 84.5%인데 반해 시노백은 60.2%에 그쳤고, 사망 방지 효과도 시노백이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3년임 질책을 마무리하면 점차 봉쇄를 풀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 민심이 임계점을 넘은 것 같다. 우리는 이미 인접국으로, 중국이 불가능한 정책을 수년째 고수하면서 받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한 동안 더 거대한 이웃이 어려서도 더 시한폭탄을 안고 뒤통지러는 것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김준의 맛과 섬 [120]

거문도 엉겅퀴된장국

그녀는 힘들 때면 거문도를 찾아 어머니의 맛을 찾는다. 거문도는 물로 나가기 전까지 머물렀던 고향이다. 그 맛을 기억하며 노을이 아름다운 순천만와 온마을에 밥집(해반)을 차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밥을 내놓는다. 갈치조림이나 방어조림을 즐겨 하지만 가끔은 식단에도 없는 ‘엉겅퀴된장국’을 내놓을 때도 있다.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울 때다.

거문도에서는 엉겅퀴를 ‘항가꾸’라 한다. 여름이 지나고, 꽃이 피고 진 후 다시 돋아나는 어린 잎과 줄기는 가시가 연해 이용하기 좋다. 이 무렵이면 제주에 머물던 갈치들이 거문도 주변으로 올라와 어장이 형성된다. 이때 폭 삶은 엉겅퀴에 간이 배도록 조물조물 된장으로 무친 후 갈치를 넣고 푹 끓인다. 엉겅

퀴의 씹살한 맛과 된장이 어우러져 갈치의 비린내도 잡고 살의 달달함과 어우러져 깊고 깔끔한 맛을 낸다.

거문도는 동도, 서도, 고도 등 세 유인도가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엉겅퀴는 섬에 흔했지만 서도의 녹산등대로 가는 오솔길에 많았다. 거문도 사람들의 갈치 사랑은 유별났다. 풀치(작은 갈치)는 말려서 말치처럼 볶아서 밥상에 올렸다. 큰 갈치는 머리는 다지고 내장과 버무려 갈치젓을 담고, 삶은 구이와 조림과 국으로 즐겼다. ‘거문도 갈치숙젓’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또 ‘갈치뱃살(배진대기) 맛을 잊지 못해 거문도 큰애기 시집 못 간다’고 했다.

강강술래에도 ‘못 가겠네 못 가겠네 늦을 같은 갈치 뱃살 두고 나는 시집 못 가겠네’라는 매김소리도 있다. 옛날 세



개의 노로 젓는 젓거리배를 타고, 소나무 관솔로 불을 밝히고 갈치를 잡았다. 한 개(보슬)나 두 개(서부슬)의 낚시바늘을 줄(술)에 매달고 손으로 낚는 채낚기 어법이었다. 성미가 급한 갈치는 물 밖으로 나오면 은빛 비늘이 벗겨지고 쉬 상하기에 얼음물에 보관했다.

이렇게 잡은 갈치는 꾸덕꾸덕 말렸다가 팔아서 쌀과 생필품을 구했고, 집집마다 된장국을 끓였다. 예전처럼 갈치가 잡히지 않고, 엉겅퀴된장국 맛도 잊히고 있다. 오랜만에 그녀가 내놓은 엉겅퀴된장국을 앞에 두고 거문도 이야기를 들었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社說

불가피한 업무개시명령, 노동·연금·교육 개혁도 좌우한다

정부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총 파업과 관련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물류 중단으로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1차 위반하면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의 경우 1차 자격 취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03년 노무현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겪은 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만든 것이다. 당시 1차 파업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가 8월 2차 파업을 당한 이후야 단호하게 대처했고, 그러자 운송 거부 차자들이 복귀를 시작했다. 윤 정부의 원칙 대처는 늦었지만 불가피한 길이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법 시행 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전례가 없는 만큼 정부가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1차 우편 송달,

2차 공사 송달 등 단계마다 적법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한다. 지자체와의 오차 없는 협동 작업이 필요하다. 허점을 보았다가는 불필요하고 지루한 법적 공방으로 실패는 거두지 못하고 혼란만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민노총 지휘 아래 산하 공공 노조들이 일제히 동원된 연쇄 파업으로 정부의 대응 능력을 시험해볼 수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주력 부대 역할이다. 지하철과 철도도 파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에 이들에게 또 양보할 경우 5년 내내 민노총에 끌려다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화물연대 파업이 극한 투쟁으로 변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노조 불법 폭력 파업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민과 기업이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심으로 견뎌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에서도 매번 기득권 집단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정부가 미숙하고 허약한 모습을 보이면 5년 동안 아무런 개혁도 못할 것이다.

백일하에 드러나는 文 정권 검찰의 꼬리자르기 대장동 수사

문재인 정권 검찰이 지난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고의적으로 문건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수사팀이 작년 10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씨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유동규와 김만배, 최윤길(전 성남시의회의장)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문정권 검찰이 대장동 수사 초반부터 실무진 몇 명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한다는 결론부터 내려놓고 수사했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은 실제로 성남시 산하기관 본부장에 불리한 유동규 씨가 민간업자들과 함께 수천억원의 특혜와 수백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가 아니라 코미디였다. 극단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억울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한다. 실무진 책임으로 몰아간 검찰 수사가 그의 죽음을 초래했는지 모른다. 대장동 최고 결정권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 김용씨를 빼고는 사건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문 정권 검찰은 정씨를

형식적으로 조사했고 김씨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자 그에게 흡이 될 수 있는 대장동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자체가 검찰의 범죄 행위다. 당시 문정권 검찰은 이런 식의 범죄 행위를 마구 저지르고 있었다.

새 정부 검찰팀은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자가 2014년 남욱씨에 게 42억5000만원을 건넨 내용이 담긴 문서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분양업자는 “남씨가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건넸고, 당시 이재명 시장 최측근에게 현금 건네진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분양업자는 이후 대장동 일대 사업권을 주기로 해놓고 소식이 없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남씨 측에 보냈다는 것이다. 새 수사팀은 정씨와 김씨 등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기로 한 428억원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진술도 받아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와 함께 문 정권 수사팀의 노골적 은폐의 전모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금으로 운동권 카르텔 지원, 반사회적인 ‘사회적 경제 3법’

민주당이 이른바 ‘사회적 경제3법’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안 하겠다며 또 입법 횡포를 부리고 있다. ‘사회적 경제3법’이란 정부·지자체가 구매하는 재화·서비스의 10%를 사회적 기업과 각종 조합에서 구매하고, 국유 재산을 무상 대여하거나 교육·훈련 지원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나 각종 조합은 시민단체들이 세운 곳이 많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특혜 3법’과 같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비슷한 비중으로 추구한다는 기업 모델이다. 이런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 많은 사회적 기업이 좌파 시민단체나 운동권 출신들이 국민 세금을 따먹는 매개체로 이용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간 시민단체들은 온갖 사업 영역에 진출해 보조금을 따먹었다. 서울시가 1조 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던 태양광 사업도 운동권 출신의 먹잇감이었다. 마을 공동체 사업에선 지원금 절반이 인건비로 지출되기도 했다. 세금을 눈بن 돈처럼 나눠 먹은 것이다.

시민단체 출신들이 서울시 사업 업체 선정위원이 돼 일감을

몰아줬다. 이 단체들이 또 다른 시민단체에 용역을 재하청하는 등 세금 따먹기 먹이사슬을 구축했다. 후임 오세훈 시장은 시민단체들에 지원된 금액이 10년간 1조원에 달한다며 서울시 금고가 “시민단체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했다”고 개탄할 정도였다. 민주당은 시민단체 먹이사슬에 지속적으로 국민 세금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아예 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기업은 자기 힘으로 이익을 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다. 기업들이 환경, 소외 계층 지원 등의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다. 이익을 내지 못해 국가와 사회에 짐을 지우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 운운하면서 국민 세금을 따먹으려는 것은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행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기업 경영 평가 항목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과도한 점수를 부여하고 다투던 결과가 주요 공기업 35곳의 영업이익률이 5년 사이 8.4%에서 4.0%로 반 토막 난 것이다. 부채는 412조원에서 540조원으로 30% 이상 폭증했다. 이 모든 것이 국민 부담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이 아니라 반사회적 압력 어린 카르텔을 먹어 살리겠다는 반사회적 악법이다.

뉴데일리

얻을 것 다 받고도 파업...화물연대는 국민 안보이나

"윤석열 정부 타도 동원령 내린 셈"
"급진·과격·극단 노동운동 세력 축출해야"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 화물연대 파업, '10만 총궐기론'의 전주곡인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는 언제나 구체적인 현안이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정치적·이념적 의도가 있다.

현안과 관련해 11월 26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카카오톡을 통해 필자의 취재 요청에 이렇게 답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발표했다. 이것으로 화물연대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그런데도 파업을 계속하면 29일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다. 물류를 멈추자, 경제를 멈추자며 운송 참여자를 협박·폭행한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확립 의지는 확고하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 박탈·검수완박·경찰 대공 수사 위축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급진·과격·극단 노동운동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문수 위원장은 개탄했다.

■ 급진·과격·극단 노동운동 수사 못하는 현실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국민이건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관심사가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앞서 나온 급진·과격·극단 노동운동권의 '10만 총궐기론'의 정치적·이념적 노림수가 뭐냐 하는 것이다. 기자회견과 촛불 현장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냈다.

"윤석열 정권은 질적 민주주의를 넘어, 노동자·민중의 직접 정치로 가자는 데 반대하는 반(反)민주주의 정권이다"

■ '10만 총궐기론'의 정치적·이념적 노림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엮어버리고, 민중민주주의 직접 민주제로 가자는 뜻이다.

그들은 말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종속 경제를 넘어, 자주적 경제체제로 가자는 데 반대하는 예측 정권이다"

'자주적 경제체제'로 넘어가자는 것은, 글로벌 자유시장 체제를 떠나 사회주의 국가 통제경제로 가자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위기 분단구조를 넘어, 평화적 자주통일로 가자는 데 반대하는 전미·전일 전쟁 유발 정권이다"라는 대목도 있다.

한국은 계급주의의 식민지라는 뜻이다. 이 식민지를 때려 부수자는 것이다.

이런 역사관과 시국관은 NL 운동권의 소위 '민족 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그대로 복장한 것이다.

'10만 총궐기론'은 결국,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급진·과격·극단 노동운동권의 동원령이었던 셈이다.

■ '10만 총궐기론'에 어른거리는 주사파 이념

화물연대 파업이 이 동원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오늘의 노동운동 현장에 그런 극단적 요소가 염존한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다.

20~21세기 세계사는 그러나, 옹변으로 입증하고 있다. 지난 세기들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한 쪽은 자유의 정치체제, 자유의 경제체제였다. 그리고 패배한 쪽은 전체주의 일당 독재, 폐쇄적 통제경제였다. 것을.

북한 3대 세습 왕조는 그 실패한 이념과 체제에 한사로 집착한다. 주민들을 영양실조, 인권탄압, 정보차단의 극악한 인간 조건에 몰아넣으면서.

우리 사회엔 북한의 참혹한 현실을 보고서도 그것을 좋다고 하는 우매한 미신 집단이 곳곳에 파리를 물고 있다.

이들은 '스탈린+마오쩌둥+주체사상'을 오늘의 한국 노동운동권에 침투시켰다. 그들 급진·과격·극단 노동운동권을 자유 체제는 단호히 퇴출해야 한다.

화물연대 다수 선의의 노동자들은 저들의 이른바 '민중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을 배척하고, 대한민국과 자유 체제를 존중하는 합법적·합리적 노동조합 노선에 확고히 서기 바란다.

원·원 노사관계로 자유·공정·변영의 대한민국 이룩하자!

